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1. 정치의 의미에 대한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수능)

(가) 사회적 회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권력 현상은 국가 수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의 활동을 정치로 보아야 한다.
(나) 권력 현상은 국가는 물론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를 포함한 사회 집단이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집단 내의 의사를 형성하는 것도 정치로 보아야 한다.

- ① (가)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② (가)는 학생 자치회가 자선 바자회 수익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 ③ (가)는 (나)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 양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시민 단체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 ⑤ (가), (나) 모두 소수의 통치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2018 수능 변형)

(가) 국가의 주요 의제에 대한 최고 의결 권한을 가지는 기구가 있었고, 모든 시민은 이 기구에 참가하여 중요한 정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였다.
(나)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기구가 대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공직 선출이나 정치 참여에 있어 재산, 성별에 따른 제한이 있었다.

- ① (가)에서는 군주 주권론에 근거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 ② (가)에서는 국가 정책을 외국인을 제외한 국가 내 모든 사람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되었다.
-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입헌주의 원리가 확립되었다.
- ⑤ (가), (나) 모두 천부 인권 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3. 다음은 사회계약설 사상가 (가)~(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작 문항, 주관식)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끝없이 서로 투쟁하고, 그 결과 항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우게 된다.
(나) 인간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구속받는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수립한다.
(다)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 데 불안을 느끼게 되며, 또 자기 권리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타인과의 사이에 혼란을 겪기 쉽다.

<보 기>

- ㄱ. (가)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은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ㄴ. (나)는 자연 상태가 잠재적 투쟁 상태라고 본다.
- ㄷ. (다)는 사회 계약을 어긴 군주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한다.
- ㄹ. (가)는 (나)와 달리 군주제를 지향한다.
- ㅁ. (나)는 (가), (다)와 달리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을 옹호하였다.
- ㅂ. (가)~(다)는 모두 국가를 자기 보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본다.

4. 다음은 '법치주의'의 구분을 위해 만들어진 표이다.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중 하나이다.) (들샘 모의고사)

질문	(가)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나요?	네	㉠
법률의 형식만을 강조하나요?	네	아니요

<보 기>

- ㄱ.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 ㄴ. ㉠에 들어갈 대답은 '네'이다.
- ㄷ. (가)와 달리 (나)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률의 형식에만 맞는다면 문제 삼지 않는다.
- ㄹ. (나)는 (가)에 비해 법의 목적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경시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 다음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 및 현대 복지 국가 헌법과 관련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다. 두 답변이 모두 정답인 항목을 고른 것은? (영월고등학교 기출)

항목	질문	답변	
		근대입헌주의헌법	현대복지국가헌법
㉠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예	예
㉡	기본권 중에서 사회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요	예
㉢	재산권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예	예
㉣	국가 통치 기관의 조직·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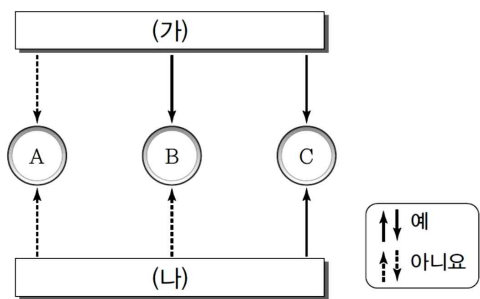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6.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년 수능기출)

- 국회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장기 요양 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요양 기관을 확충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 헌법 재판소는 영유아 보육법의 직장 보육 지원 조항이 근로자들의 안정적 육아 및 고용 안정을 이루어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 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②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 ③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임금제를 시행한다.
- ④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 ⑤ 상호주의에 근거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위를 보장한다.

7. 그림은 (가), (나)를 기준으로 기본권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중 하나이다.) (자작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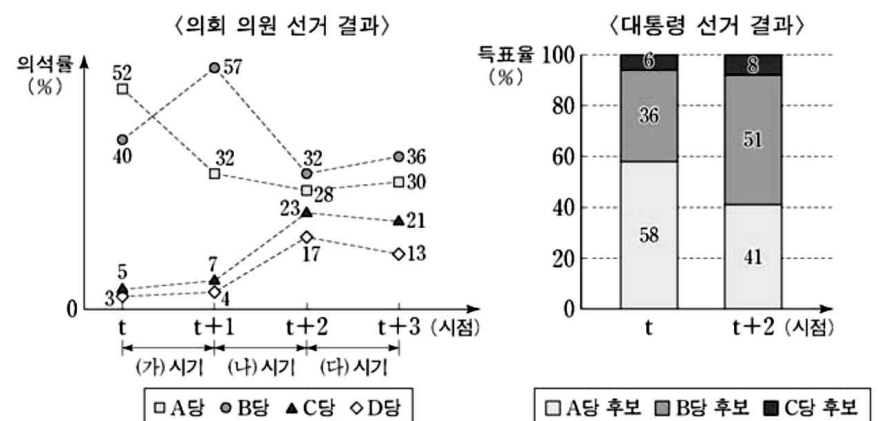
- ① (가)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가?'는 들어갈 수 있다.
- ② (나)에 '복지 국가의 원리를 반영하는가?'는 들어갈 수 있다.
- ③ A가 능동적 권리라면 (나)에 '적극적 권리인가?'는 들어갈 수 없다.
- ④ B가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라면 (가)에 '국가에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인가?'는 들어갈 수 없다.
- ⑤ C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라면 (나)에 '국가에 의한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인가?'는 들어갈 수 있다.

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수능기출)

미결 수용자로 구치소에 있었던 갑은 구치소의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싶었으나 구치소장이 이를 금지하여 참석할 수 없었다. 갑은 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면서 참석 불허 조치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조치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범과 접촉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범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공범이 있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각각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조치로 얻어질 공익이 갑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인용 결정을 하였다

- ① 갑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② 구치소장의 적극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심판 대상이다.
- ③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장의 종교 행사 참석 불허 조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 ④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장의 종교 행사 참석 불허 조치보다 침해가 작은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 ⑤ 위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은 재항고할 수 없다.

9. 다음 자료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시기별 선거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년 수능)



* t시점과 t+2시점에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t+1시점과 t+3시점에는 의회 의원 선거만 실시되었다.

- <보 기>
- ㉠.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가) 시기였을 것이다.
 - ㉡. (가) 시기에 비해 (나) 시기에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 ㉢. (가) 시기에 비해 (다) 시기에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 ㉣. (나) 시기에 비해 (다) 시기에 C당이 B당을 견제하기 용이했을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각자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21 수특)

- T기 갑국에서 A당은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하였고, T기 을국에서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였다.
- 표는 T기와 T+1기의 갑국과 을국의 정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T기		T+1기	
	갑국	을국	갑국	을국
제1당	A당	B당	C당	D당
제1당의 의석수(석)	105	55	ⓐ	95
제2당의 의석수(석)	71	40	62	88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	㉡	C당	㉢

* T기와 T+1기 모두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변함이 없다.
 ** T기와 T+1기 모두 갑국, 을국 의회의 총 의석수는 200석으로 동일하며, 무소속 의원은 없다.
 * T기와 T+1기 모두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변함이 없다.
 ** T기와 T+1기 모두 갑국, 을국의 의회의 총 의석수는 200석으로 동일하며 무소속 의원은 없다.

- ①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의회는 각료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진다.
- ② 갑국의 행정부가 의회에 의해 불신임을 당하면 각료와 달리 행정부 수반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 ③ ㉠은 'A당'이고 ㉡은 '101석 이상'이다.
- ④ ㉢이 'D당'이고 ㉣이 'B당'이면 을국의 T+1기가 T기보다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⑤ ㉠과 ㉡ 모두 'D당'이면 을국의 T기와 T+1기 모두 여당에 비해 야당의 원내 의석수가 많다.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9월 모평 변형+21년 6월 선지 변형)

정치 과정은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지지가 ㉠ 정책 결정 기구에 ㉡ 투입되어 정책으로 형성·조정·집행되는 ㉢ 산출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의 산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 환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정책이 수정·보완되거나 국민의 요구가 재투입되기도 한다.

- ① 사법부는 ㉠에 해당한다.
- ② 국가의 정책 시행 이후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온라인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만의 예이다.
- ③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의 예이다.
- ④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전체주의 국가에서보다 ㉣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은 모두 정치 외적 요소인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19년 7월 학평)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6명이다. 갑국 국민들은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갑국 의회 의원들은 대표자 선출 방식과 선거구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 경계선이 접한 두 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함. (대각선 방향으로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음.)
-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2:1을 넘을 수 없음.
- 각 정당은 한 선거구에 1명의 후보를 공천함.
-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명을 당선시킴.

<자료 1>은 갑국의 현행 의회 의원 선거구 및 유권자 수를, <자료 2>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선거구별 정당 득표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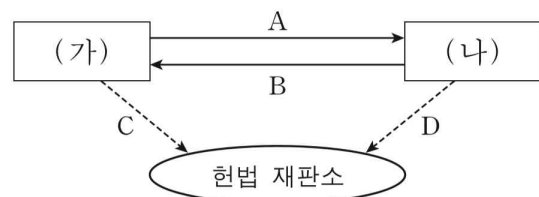
<자료 1> (단위: 명)		<자료 2> (단위: %)						
I (100)	II (100)	선거구	I	II	III	IV	V	VI
III (150)	IV (200)	정당						
		A당	35	25	30	55	60	39
		B당	45	35	20	25	30	26
V (350)	VI (100)	C당	20	40	50	20	10	35

* 개편안의 경우, 위 <자료 1>과 <자료 2>를 근거로 차기 선거 결과를 판단함.
 ** 갑국은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 ① 선거구제 변경으로 사표가 증가할 것이다.
- ② 개편안의 경우 III선거구와 V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 ③ 개편안의 경우 현행 대비 정당 의석수 변화가 가장 큰 정당은 A당이다.
- ④ 개편안의 경우 B당은 과소 대표, C당은 과대 대표될 것이다.
- ⑤ C당과 달리 B당은 개편안이 현행 선거 제도보다 유리할 것이다.

13. 그림은 우리나라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국회, 정부 중 하나이다.)

(17년 9월 모평)



* A와 B는 국가 기관 간의 견제 방향을, C와 D는 헌법 재판의 청구 방향을 나타냄.

- ① A가 '국정 감사·조사권'이면, B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될 수 있다.
- ② B가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이면, A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이 될 수 있다.
- ③ B가 '법률안 거부권'이면, C는 '탄핵 소추권'이 될 수 있다.
- ④ D가 '정당 해산 심판 제소권'이면, (가)는 '선전 포고·강화권'을 가진다.
- ⑤ B가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면, (나)는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부의권'을 가진다.

14.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6월 모평)

- ○○군 주민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 ○○군수를 임기 중에 주민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
- □□시 의회는 △△당 의원이 발의한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섭취를 금지하는 ㉡ 조례 제정을 하였다.

- ① ㉠은 주민 소환 제도에 해당한다.
- ② ㉠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제한한다.
- ③ ㉡은 주민 투표로 확정된다.
- ④ ㉡의 권한은 집행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진다.
- ⑤ ㉠, ㉡은 모두 중앙 정부와의 수평적 권력 분립에 기여한다.

15. 우리나라 헌법 기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7월 학평)

㉠ 대통령의 연간 업무 기록	
1월	신임 ㉡ 대법원장 임명
2월	㉢ ◇◇부 장관 임명
3월	㉣ 감사원 업무 보고
4월	추경 예산안 시정 연설 위한 ㉣ 국회 방문

- ① ㉠이 ㉡을 임명하는 것은 ㉠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 ② ㉠ 또는 ㉣의 재적 의원 10인 이상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③ ㉣의 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때에 ㉡은 탄핵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 ④ ㉣은 국정 감사 및 조사를 통해 ㉡을 견제한다.
- ⑤ ㉠은 ㉣의 동의가 있어야 ㉡을 임명할 수 있다.

1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년 6월 모평 수정)

근대 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계약 자유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다. 이러한 근대 민법의 원칙들은 독과점, 빈부 격차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각각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 ① ㉠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을 인정한다.
- ② ㉡은 ㉢로 수정·보완되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적용된다.
- ③ ㉢에 따르면 소유권은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 ④ ㉣에 따르면 노예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 ⑤ ㉤을 적용한 예로 사업자의 환경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들 수 있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모두 16세이다.) (21년 수완 변형)

- A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다. 갑은 판매 당시 A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 B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을은 판매 당시 B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
- C는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 ① 갑과 달리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을은 B의 부모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 A의 부모는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B의 부모와 달리 C의 부모는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A, B 모두 부모에게 받은 용돈으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했다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갑(16세), 을(14세), 병(10세)은 수업을 받던 중, 고용된 강사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13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갑은 망을 보고 을과 병이 정을 때려 정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정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강의실을 뛰쳐나가다 택배 기사 C를 밀어 C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현재 갑, 을, 병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정은 A에게 남은 기간의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18.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9년 수능)

- ① 정에 대한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정에 대한 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은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A가 B의 사용자로서 정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B는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B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A는 정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⑤ 정이 C에게 부상을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정의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19. 갑~병의 소년 사건 처리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9년 수능)

정에게 상해를 입힌 갑, 을, 병의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갑과 을은 검사에게, 병은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검사는 갑과 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 ① 을, 병은 갑과 달리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
- ② 갑과 을의 행위는 병의 행위와 달리 구성 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하다.
- ③ 검사가 갑과 을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더라도 갑과 을을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갑과 을을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 가정 법원 소년부가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⑤ 병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다면 갑, 을의 부모와는 달리 병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20. 다음 사례에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1년 수완)

- 갑과 을은 혼인 후 병을 낳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갑이 사업에 실패하여 술을 먹는 날이 많아지고 심지어 을과 병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갑과 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
- A와 B는 혼인 후 C를 낳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A가 B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외박을 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결국 A와 B는 합의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

- ① 배우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을과 달리 B만 가능하다.
- ② C가 성인이라면 A와 B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았을 것이다.
- ③ 병이 미성년자라면 ㉠을 통해 병에 대한 갑의 친권은 상실된다.
- ④ 병과 C가 미성년자라면 ㉠, ㉡ 이후 병과 C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 ㉡ 모두 법원에서의 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가능하다.

21. (가) 사례를 (나)에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수능)

(가) 홀어머니 A의 아들 갑은 을과 법률혼을 하여 B를 낳았다. 그 후 갑은 을과 이혼하고, B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을이 갖기로 하였다. 2년 후, 갑은 병과 법률혼을 하면서 병과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C를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약속하였다. 1년 후 A와 갑, 병은 여행 중 사고를 당하여, A는 곧바로 사망하고 다음 날 갑과 병도 사망하였다. A와 병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나, '전 재산의 1/2을 ○○ 재단에 기부한다.'라는 갑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사고 당시 A와 갑은 모두 채무가 없었고 A에게는 18억 원, 갑에게는 10억 원의 재산이 있었으며, 병은 재산과 채무가 모두 없었다.

(나)

질문	상황	
갑이 C를 친양자로 입양했는가?	㉠ 입양함.	㉡ 입양하지 않음.
갑이 유언장이 유효한가?	㉢ 유효함.	㉣ 유효하지 않음.
갑과 병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	㉤ 갑이 먼저 사망함.	㉥ 병이 먼저 사망함.

- ① ㉠, ㉢, ㉥의 상황에서 B의 상속액은 최소가 된다.
- ② ㉠, ㉢, ㉥의 상황에서 C의 상속액은 최대가 된다.
- ③ ㉡, ㉣, ㉥의 상황과 ㉠, ㉢, ㉥의 상황에서 C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 ④ ㉠, ㉢, ㉥의 상황과 ㉠, ㉢, ㉥의 상황에서 B의 상속액은 C의 상속액보다 크다.
- ⑤ ㉡, ㉣, ㉥의 상황과 ㉡, ㉣, ㉥의 상황에서 C의 상속액은 B의 상속액의 1.5배가 된다

22. 밑줄 친 'A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9년 수능)

갑은 을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 파일을 자신의 이동식 저장 장치에 몰래 복사한 행위와 관련하여 절도죄로 공소 제기되었다. 갑은 1심 재판에서, 컴퓨터 파일과 같은 전자 정보를 복사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절도 행위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A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보 기>

- ㄱ.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모두 적용된다.
- ㄴ. 범죄와 처벌이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ㄷ. 적용할 형법 규정이 없는 경우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ㄹ. 범죄 행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게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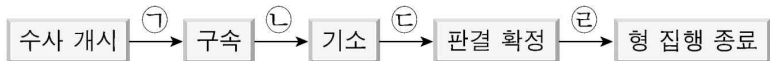
2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년 수능)

- 갑(17세)과 을(13세)은 골목을 지나가던 병(15세)을 폭행하였다. 병은 갑과 을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달리 피할 방도가 없어 음식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숨게 되었다. 병은 갑과 을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 정(25세)은 무(20세)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협박을 하여 무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가게의 금고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강요하였다. 무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금고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정이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갑은 을과 달리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② 을은 갑과 달리 가정 법원 소년부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
- ③ 병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
- ④ 정과 달리 갑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무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2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년 9월 모평)

갑은 을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을의 고소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 ① ㉠ 단계에서 상해와 관련된 물건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 단계에서 갑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③ ㉢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
- ④ ㉡ 단계와 ㉢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의 주체는 동일하지 않다.
- ⑤ ㉣ 단계에서 갑은 판사의 지휘에 의해 가석방될 수 있다.

2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10월 학평)

근로 계약서

사용자 A와 근로자 B(17세)는 다음과 같이 ㉠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시간: ㉡ 09시~17시(휴게 시간은 13시~14시)
2. 근로 기간 및 근무일: 2020년 1월 1일 ~ 2020년 2월 29일 /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 임금 및 지급 방법: ㉣ 시간당 8,000원 / ㉤ B의 통장에 매월 10일, 25일에 입금

* 2020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8,590원임.

- ① ㉠은 B의 부모가 직접 체결할 수 있다.
- ② ㉡은 근로 기준법에 어긋난다.
- ③ ㉢에 따른 B의 주당 근로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어긋난다.
- ④ ㉣은 법정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 계약의 내용 전체가 무효이다.
- ⑤ ㉤에서 B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과 달리 매월 2회 지급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 위반이다.

2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년 9월 모평)

갑(15세)은 동생 을(9세)과 길을 걷던 중, 머리 위로 떨어지는 간판을 피하려다 같이 가던 병(18세)을 밀쳤고 그 결과 병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그 사정을 몰랐던 병은 순간 화가 나 갑과 을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갑과 을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양갈을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갑과 을은 병의 노트북을 훔쳐 사용하다가 정에게 팔아 버렸다. 며칠 후 정이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우연히 본 병은 정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노트북을 되찾았다.

- ① 병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와 관련하여 갑과 달리 을에게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다.
- ② 절도 행위와 관련하여 을과 달리 갑에게는 가정 법원 소년부에 의해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 ③ 절도 행위를 이유로 갑이 기소되었다면, 형사 법원은 형벌 외에도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④ 갑과 을에 대해 상해 행위를 한 병에게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 ⑤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노트북을 되찾은 병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1년 9월 모평)

□□ 의류 회사 노동조합은 ㉠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여 근로 조건에 관해 사용자 측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하였다. 다음은 최근 사용자에게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갑, 을, 병의 상황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구분한 것이다.

질문	갑	을	병
적법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예	예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예	아니요

* 갑, 을, 병 모두 □□ 의류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음.

-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을 가진다.
- ② 갑의 근로관계 종료 사안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다.
- ③ 갑, 을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다.
- ④ 갑, 을은 병과 달리 사용자에게 의해 정당한 근로 3권 행사가 침해되었다.
- ⑤ 갑, 을, 병의 해고에 대해 □□ 의류 회사 노동조합도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8.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9월 모평 일부 변형)

A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단 안보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B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 연맹이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하였고, 이후 설립된 국제 연합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국가 간 분쟁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B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동맹을 맺는 것이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보 기>

ㄱ. A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한다.
 ㄴ. B는 국제 사회가 도덕 규범에 의해 통제되기 어렵다고 본다.
 ㄷ. B는 A와 달리 초국가적 행위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ㄹ. A는 계몽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B는 흡스의 자연관을 기반으로 한 관점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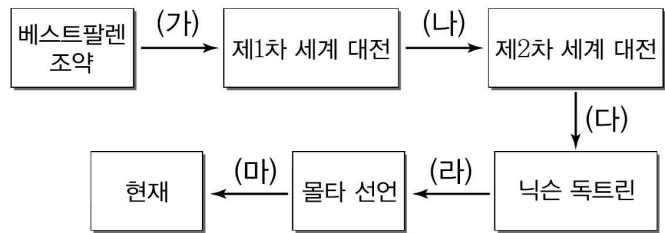
29.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1년 수특)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대를 8개월째 무차별 학살하고 있는 갑국 정부에 대한 경고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되지 못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국제 연합은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갑국에서 2,700여 명이 정부군의 유형 진압과 무장 충돌로 숨진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다음은 표결 결과이다.

국가	A	B	C	D	E
표결	찬성	찬성	기권	찬성	기권
국가	F	G	H	I	J
표결	찬성	기권	찬성	반대	찬성
국가	K	L	M	N	O
표결	반대	기권	찬성	찬성	찬성

- ① C, E, G, L국은 비상임 이사국일 것이다.
 ②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로 표결되었다.
 ③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④ I국과 K국 중 최소 1개국은 상임 이사국일 것이다.
 ⑤ 결의안 의결을 위한 찬성 투표 기준에 미달하여 부결되었다.

30.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과 관련하여 (가)~(마)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이 치열했다.
 ② (나)-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맹 활동이 활발했다.
 ③ (다)-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간 냉전 체제가 심화되었다.
 ④ (라)-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다원화로 양극 체제가 완화되었다.
 ⑤ (마)-냉전 체제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31. 다음 사례와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년 10월 학평 일부 변형)

㉠ 국제 사법 재판소는 2002년 갑국이 영토 분쟁 지역인 OO 반도를 을국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 판결하였다. 그러나 갑국 정부의 반발로 이양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에 2006년 ㉢ 국제 연합 사무 총장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갑국과 을국은 ㉣ 그린트리 협정을 체결하였고 OO 반도는 을국에 귀속되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갑국이 판결에 계속해서 불복했다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① ㉠에서의 재판은 제3국의 제소만으로는 열릴 수 없다.
 ② ㉢의 총회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가 적용된다.
 ③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는 체결될 수 없다.
 ④ ㉢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은 판결된 내용을 강제 집행할 수 없다.
 ⑤ A에는 '㉢의 안전 보장 이사회가 판결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이 들어간다면 적절한 진술이다.

※ 확인 사항

- 해당 자료는 EBS 연계교재, 평가원, 교육청 문제를 직접 활용 또는 변형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시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정답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wnstn020729@naver.com 으로 연락해 주시거나, 오르비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지

- 1. 5
- 2. 4
- 3. ㄷ, ㄹ, ㄱ
- 4. 1
- 5. 4
- 6. 3
- 7. 5
- 8. 4
- 9. 2
- 10. 5
- 11. 1
- 12. 5
- 13. 3
- 14. 1
- 15. 1
- 16. 2
- 17. 1
- 18. 1
- 19. 3
- 20. 5
- 21. 4
- 22. 1
- 23. 1
- 24. 4
- 25. 3
- 26. 2
- 27. 2
- 28. 3
- 29. 4
- 30. 2
- 31. 3